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 ②

2015.8.17 | 강세진_새사연 이사 | wisemaninspace@daum.net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이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공동체 주거 모델 : 주체별 역할 및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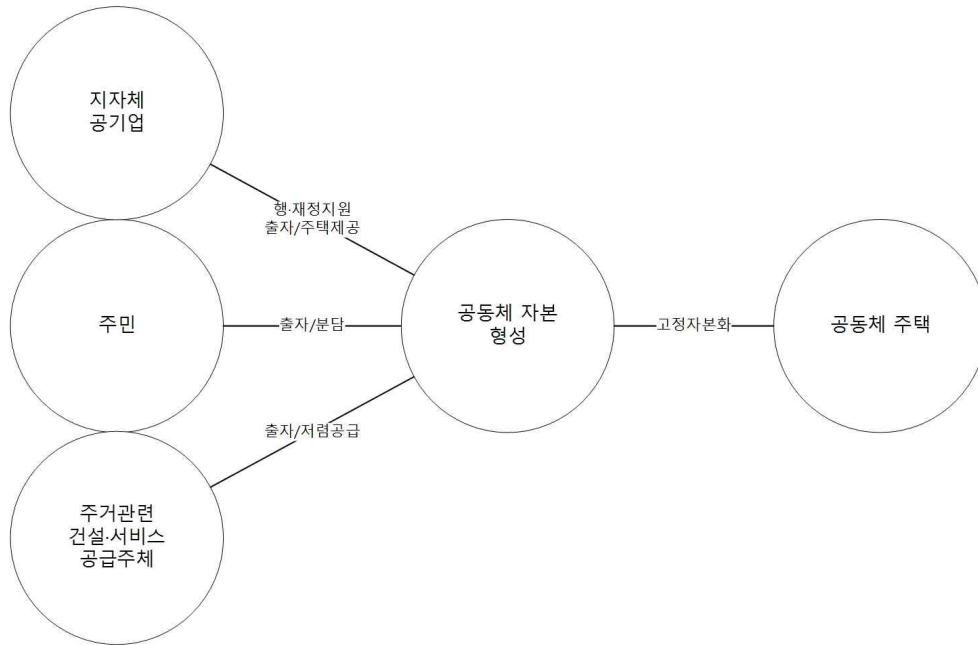
공동체 주택의 공급 모델의 기본개념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 주민, 주거관련 건설·서비스 공급주체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고정자본화(주택의 건설, 매입, 임대 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은 출자나 비용분담 등을 통해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기본주체이며 지자체 및 공기업은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자를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한편 주거관련 건설·서비스공급주체는 출자를 통해 주민들과 공동으로 공동체 자본을 형성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 자본의 형성을 돕는다.



그림 1. 공동체 주택 주체별 역할 및 기본구조



자료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6쪽

공동체 주거 모델의 기대효과 : 주거비용의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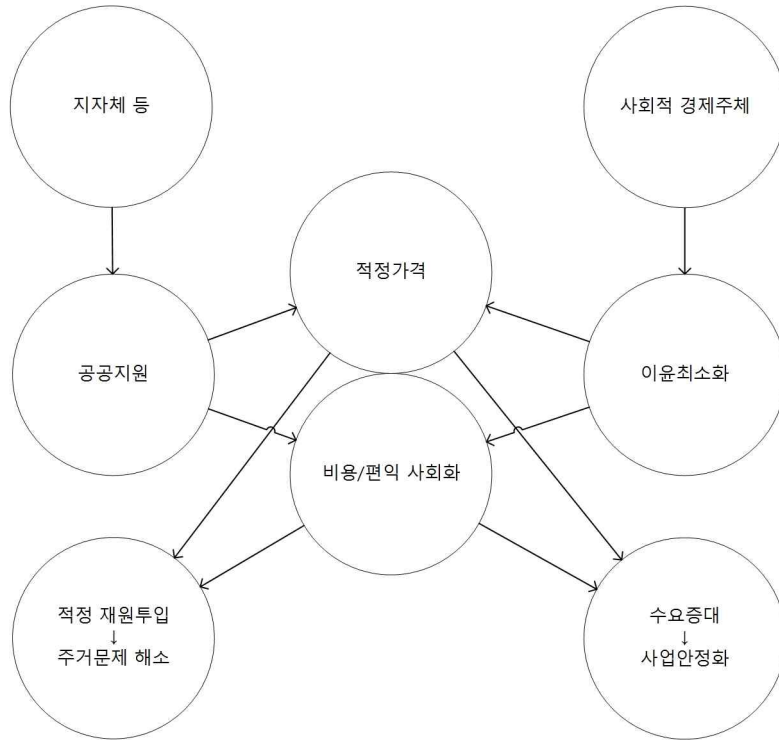
공동체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의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공공지원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이윤최소화를 통해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는 주택을 공급하는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입장에서는 적절한 재원을 투입하여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적정가격에 따라 증대되는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주택의 공급비용이 절감되면 결국 최종 수요자의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아니 낮아져야 공동체 주거 모델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명분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롯이 공공재원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는 없겠으나, 공공, 공급·관리주체, 입주자 등이 서로 적정하게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공동체 주거 모델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림 2. 공동체 주거 모델의 기대효과



자료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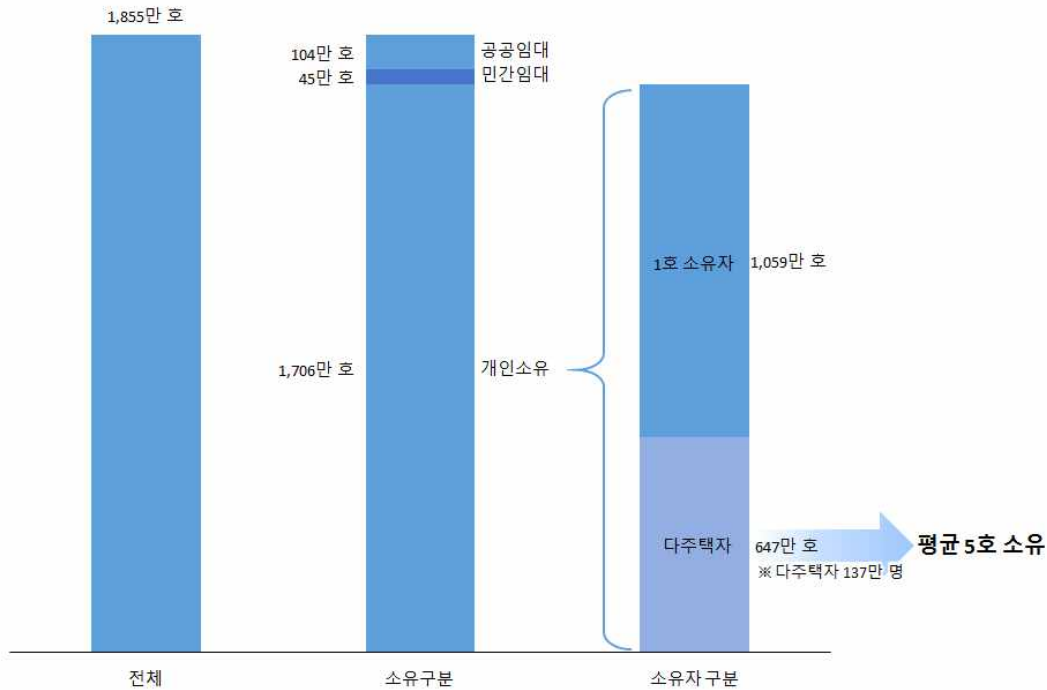
공동체 주거 모델 실현 주체(1) :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약 1,706만 호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소유자는 1,196만 명이며 이 중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1,059만 명이므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137만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706만 호에서 집 한 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1,059만 호를 제하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약 647만 호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1인 당 평균 5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주택들이 전월세의 대상이다.¹⁾ (그림 3 참조)

1) 강세진(2014),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새사연 이슈진단(75). (<http://saesayon.org/2014/11/02/14809/>)



그림 3. 주택재고 및 소유현황(2012년)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통계, 임대주택통계; 통계청 개인별주택소유통계
강세진(2014),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새사연 이슈진단(75).
(<http://saesayon.org/2014/11/02/14809/>)

이처럼 주택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임대되는 주택의 소유자 구성도 복잡하다. 과거에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자가거주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주로 펼쳤으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는 한 주택의 투자가치가 높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서 주택실소유자의 구매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보유촉진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을 때 주택실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민간임대의 경우 투자자의 이윤이 고스란히 임대료에 반영되지만 공공임대주택에는 이윤이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택도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과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에 의한 관리가 소홀하여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대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도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의 경우 지속적인 임대수익을 위해 주택의 소유자가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의 경우 주택의 품질을 유지할 여력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세입자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량주거지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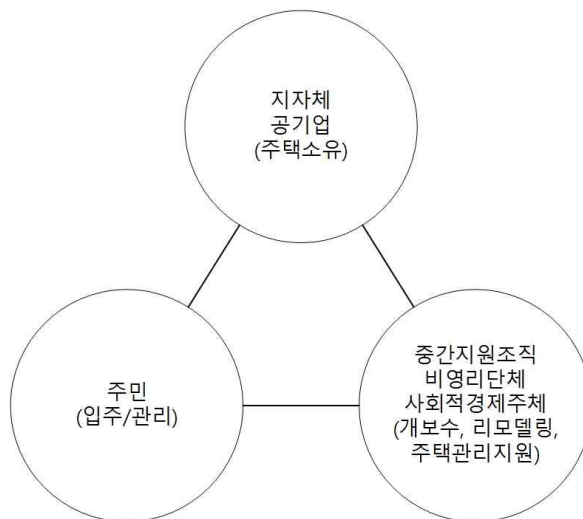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의 도입 및 활성화이다. 개인의 경제력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Ⅰ형)과 제3자 소유의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Ⅱ형)을 검토할 수 있다.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Ⅰ형) : 공공임대주택 활용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는 지자체 또는 공기업 소유의 주택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주택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지자체 및 공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주체 등은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Ⅰ형) : 공공임대주택 활용



자료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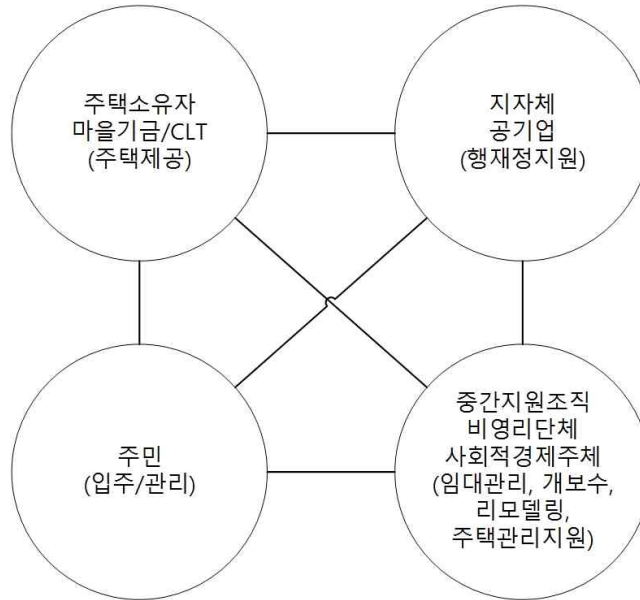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II형) : 제3자 소유 주택 활용

제3자 소유 주택을 활용하는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는 주택소유자가 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자체 등에서 주택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이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이 때 공공지원의 대가로 주택소유자에게 장기간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임대를 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이 모델에서는 효율적인 임대 관리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을 임대관리업자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소유자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일차적으로 장기간 임대관리계약을 맺고 사회적 경제주체 등은 주민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 된다.

이 모델을 활용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공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주체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주거 공동체 모델이 활성화될 경우 세입자가구 밀집지역의 노후화 방지 및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II형) : 제3자 소유 주택 활용



자료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1쪽.

한편 이 모델에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로 마을기금이나 CLT(community land trusts)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마을기금의 경우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공지원의 조건으로 조성을 의무화하고, 기금의 일부를 공동체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CLT는 우리나라의 토지임대부주택과 유사한 정책으로써 공적으로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조성된 공동체기금을 바탕으로 택지를 마련하고 그 택지를 주택 실수요자에게 장기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주민은 제공받은 택지에 주택을 건설한 후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가진다. 이런 주택 공급방식을 뮤추얼하우징(mutual housing)이라 하며 서구에서 적정가격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주거 공동체 모델에서 CLT를 활용할 경우 CLT는 택지를 주민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제공하고, 택지를 제공받은 주민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은 CLT를 직접 조성하거나 행정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6. CLT 개념 예시 (New York Foundation)



자료 : • <http://www.neweconomynyc.org/2014/04/new-york-foundation-homelessness-community-land-trusts-future-nyc-neighborhoods/>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2쪽 재인용.

공동체 주거 모델 실현 주체(2) : 사회적 경제주체형 주거 공동체

거버넌스형 주거 공동체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각 주체 간 입장차 등 다소의 난관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장기간의 협의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주체형 주거 공동체는 공동체 주택의 공급과 해당 주택의 관리 및 주거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모델이다. 주택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소유·관리할 경제주체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금, 마을기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출자, CLT를 통한 택지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건축·개보수·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급주체가 출자를 통해 공동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협약을 통해 결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주택관리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주택관리업체 등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동체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할 주체인 돌봄이나 아동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하거나 업무협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들은 주거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공동사업에 참여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경제주체형 주거 공동체 모델의 일반적인 사례는 서구의 주택협동조합이다(표 1 참조). 주민들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 및 조합비 등을 부담하고,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주택을 건설·소유·관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건설과정은 우리나라의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등과 유사하지만 주택의 건설 후에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이 계속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다(강세진 외, 2014).

사회적 경제주체형 주거 공동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영구히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주택을 직접 소유할 때 발생하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협동조합 자체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서구에서는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에도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의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강세진 외 2014).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주택협동조합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택에 입주할 주민들이 직접 주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을 통해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으므로 비영리나 적은 이윤을 남기는 형태의 조직체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대표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



표 1. 국외 주택협동조합 사례 및 운영구조

국가 ¹⁾	자국분류	사업내용		자본조성		자본반환	
		제공 서비스	출자·지원 외 비용보전	출자성격	자본이득 ²⁾ 귀속	조합탈퇴 (지분반환)	반환지분
AUT	for rent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for sale	분양	분양대금	청약금	-	주택분양시	소유권
BEL	social housing ³⁾ / renovation ⁴⁾ / tenants' co-op.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CAN	permanent rent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CZE	rent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DEU	-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EGY	owner-occupied	분양+ 주택관리	관리비	분양대금	협동조합(한시적 ⁵⁾ 조합원	주택처분시	출자금 + 시세차익
ESP	VPO/VPT/tree ⁶⁾	임대	임대료	주택지분구입	협동조합 (제한기간후)조합원	퇴거시	출자금 + 시세차익
	rent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EST	-	주택관리	관리비	조합가입	-	주택처분시	출자금
FRA	HLM ⁷⁾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분양	분양대금	청약금	-	주택분양시	출자금
HUN	-	주택관리	관리비	조합가입	-	주택처분시	출자금
IND	tenant ownership	택지임대 ⁹⁾	토지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주택처분시	출자금
	tenant co-partnership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IRL	co-op. rent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ITA	conventional	분양	분양대금 ¹⁰⁾	청약금	-	주택분양시	소유권
	soci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NOR	equity share	임대	임대료	주택지분구입	협동조합 조합원	퇴거시	출자금 + 시세차익
POL	ownership co-op.	구분소유권 양도	관리비	주택지분구입	협동조합 조합원	퇴거시	출자금 + 시세차익
POR	for selling	분양+ 주택관리	분양대금 ¹¹⁾ 관리비	청약금	-	퇴거시	소유권
	for renting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SUI	membership/ entrepreneurial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SWE	-	임대	임대료	주택지분구입	협동조합 조합원	퇴거시	출자금 + 시세차익
TUR	construction co-op.	분양	분양대금	청약금	-	주택분양시	소유권
UK	ownership/ stock transfer ¹²⁾ / self-build ¹³⁾	임대	임대료	임대보증	협동조합	퇴거시	출자금
	tenant management ¹⁴⁾	주택관리	관리비	조합가입	-	퇴거시	출자금
USA	market rate/ limited equity/ leasing ¹⁵⁾ / special interest ¹⁶⁾	임대	임대료	주택지분구입	협동조합 조합원	퇴거시	출자금 + 시세차익 ¹⁷⁾

1)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ZE[체코], DEU[독일], EGY[이집트], EST[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RA[프랑스], HUN[헝가리], IND[인도], IRL[아일랜드], ITA[이탈리아], NOR[노르웨이], POL[폴란드], POR[포르투갈], SWE[스웨덴], SUI[스위스], TUR[터키], UK[영국], USA[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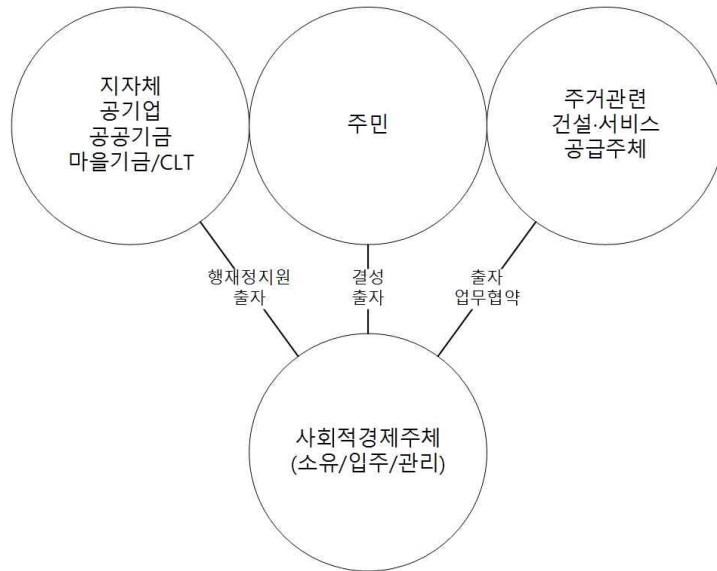
2) 주택가격 상승 등
3) 공공임대주택을 협동조합형으로 공급
4) 노후주택 매입·수리 후 임대
5) 점유 후 10년 내 퇴거 시 매매가격의 20% 협동조합에 반환
6) VPO[Viviendas de Proteccion Oficial: 50년 거래제한; 가격규제], VPT[Vivienda a Precio Tasado: 가격규제], tree[실제비용→거래가격]
7) Habitacions Loyer Modéré [저렴임대주택]
8) 비조합원 임대·분양도 허용. 이 경우 잉여금(사업이익)을 조합에

적립하고 남는 경우 조합원에게 제한적 배당이 허용됨
9) 주택은 조합원이 직접 건축하거나 협동조합이 위탁건축
10) 잉여금의 3%를 주택기금에, 30~70%를 협동조합에 적립
11) 건설비용의 130% 이하
12) 공공임대주택을 주택협동조합으로 전환
13) 조합원이 직접 주택건설에 참여(출자로 인정)
14) 공공임대주택을 주택협동조합에서 관리
15) 기존주택재고를 주택협동조합에서 확보 후 재임대
16) 노인, 예술가, 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 대상
17) market rate[시세적용] / limited equity[정률] / leasing[정률 또는 불인정(non-equity)] / special interest[불인정]

자료: 강세진 외(2014), "국외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 216쪽



그림 8. 사회적 경제주체형 주거 공동체



자료 :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95쪽.

참고문헌

1. 강세진(2014),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새사연 이슈진단(75). (<http://saesayon.org/2014/11/02/14809/>)
2. 강세진 외(2014), “국외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9(2) : 209-228.
3. 강세진 외(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http://www.gri.re.kr/연구보고서/>)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8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강세진